

한국정치, ‘제3의 힘’ 찾아나서야 할 때

곽윤석 / 뉴코리아정책연구소

이명박정부 7개월째를 맞아 지금 한국사회가 정치적, 사회경제적으로 급격히 퇴보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더 이상 ‘평화와 번영을 향해 도약하는 민주사회’ 대한민국이 아니다.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형성된 여대야소와 강보약진의 정치구도가 갖는 기형성은 말할 것도 없고 다시는 후퇴할 것 같지 않았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민주 기본권마저 위태롭다.

시청앞 20만 불교도대회가 말해주듯 지역, 이념, 빈부에 이어 종교까지 정치 양극화의 질곡에 편입되고 말았다.

사회경제적으로도 미국과의 잘못된 쇠고기 협상으로 추락하고 무너져 국민 앞에 두 번이나 고개 숙였던 굴욕을 씻어낼 자신이 생겼는지 정부는 마침내 올림픽 특수를 기반으로 공기업 선진화와 감세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 10년 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경제위기에 현 정부 자신이 큰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당당함도 문제려니와 스스로 추진하는 정책이 몰고 올 역기능을 생각하지 않는 용감성도 걱정된다. 기간산업에 대한 선부른 민영화는 광우병 쇠고기 사태 못지않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상 최대의 감세 정책 또한 고소득층과 재벌대기업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킴은 물론 정부가 최종적으로 보유해야할 재정정책 수단마저 포기하는 악수가 될 수 있다.

이명박정부의 성격이 문제다.

세 가지다. 경제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신자유주의 보수정권으로서의 성격이 첫째다. 다음은 언론통제를 포함한 민주기본권을 약화시키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신권위주의 독재정권으로서의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대결적 남북관계와 미일동맹에 의존하는 신냉전주의 사대주의정권으로서의 속성이다.

그러나 정작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세 가지 성격이 현상적 측면이 강하다는 점인데, 본질에 있어 신자유주의는 재벌대기업에 의존하고 신권위주의는 보수언론에 의존하며 신냉전주의는 미국에 의존하는 ‘국가자율성’ 약화로 귀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청에서 광화문을 가득 메운 촛불시위 참가자들을 보면서 디지털 민주세대 출현을 축복할 수는 있지만 기실 그들의 힘으로 한국사회의 정치적, 사회경제적 퇴보를 억제할 수는 없다. 새로운 정치적 메인스트림을 준비해야 할 때다. 반호남 지역주의, 반진보 보수주의, 반통일 분단주의에 기생하고 있는 수구정치세력과 자기진화에 실패하고 정치의제 설정에 무력한 진보정치세력이 양분하고 있는 한국정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 그것이 현실점에서 반드시 정당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의미는 물론 아니다. 다만 정치적 헤게모니가 낡은 관행과 구조 속에 지속적으로 갇혀있으면 그 결과 역시 낡은 것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질서의 붕괴도 질서의 과잉도 카오스를 낳는다. 한국은 지금 붕괴와 과잉의 두 상황이 중첩되고 있다. 지금이 한국정치의 카오스다. 이제 카오스를 딛고 전진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아니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민주주의에 경도되어 공화주의는 소홀히 다루어왔다. 민주주의의 형식에 공화주의적 내용을 채우는 것이 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87년 헌법의 총체적 진단과 대통령제의 묵은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서의 개헌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성장과 복지의 해묵은 논쟁도 자본이 아닌 사람을 위한 국가를 올바르게 확립하고 인적자본 육성으로 수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점검과 모색이 한국정치 제3의 힘을 찾아나서는 과정이기를 기대해 본다.